

 해양수산부		<b>보 도 자 료</b>	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차세대 한국판뉴딜	
배포 일시		2021. 6. 21.(월) 총 4매 (본문 2, 참고 2)			
담당 부서	해양보전과	담당 자	• 과장 최성용, 사무관 김훈근 • ☎ (044) 200-5300, 5306		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22일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를 확대된다

### -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-

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6월 2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(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)」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,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▲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

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(패각)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#### ▲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, 과태료 신설

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

- 1 -

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. 이에,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#### ▲ ‘연안정화의 날’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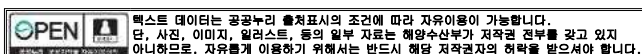
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‘연안정화의 날’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.

#### ▲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

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,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,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‘자본금’을 추가하도록 하였다.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.

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,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 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.

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“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

## 참고 1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### □ 개정 목적

-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**입법 미비사항** 등을 개선하고, 해양폐기물의 **관리 효율성을 제고**할 수 있도록 **개정 추진**

### □ 주요 내용

- **(폐기물 활용 확대)** 해양에서 **활용**할 수 있는 **대상 폐기물**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 등이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
\* (현행) 준설물질 → (변경) 준설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
- **(기술인력 교육)**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**기술요원**에 대한 **교육을 의무화**하여 사업 부실 및 사업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
- **(지자체 재정 지원)** ‘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’ 및 ‘해양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’를 지자체 지원(재정적·기술적) 대상으로 추가  
\* 기존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상에서는 ‘오염된 퇴적물의 수거’가 지자체에 재정적·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
- **(연안정화의 날 근거)** 국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
\* 연안정화의 날의 날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
- **(벌칙 세분화)**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의 위반에 대한 **벌칙**을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**세분화**하고 **경미한 위반**에 대해서는 **과태료 부과**  
\* (현행) 위반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3 -

## 참고 2 연안정화활동 사진



- 4 -